



2026. 5.

국회예산정책처 |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최성찬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최성찬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강숙자 공공기관평가과 행정실무관
장강희 공공기관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 02) 6788-3782 | peb5@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6.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04.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차 례

CONTENTS

요 약 / 1

I. 개 요 / 1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2. 분석 범위 및 대상	3
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개념	3
나.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의 개념	4
다. 분석 대상	6
(1) 정부 위탁사업의 범위	6
(2)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6
(3) 그 밖의 분석 제외 사업의 범위	9
3. 분석방법	10

II. 현 황 / 11

1. 정부 위탁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11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13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14
라.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지침)	15
마.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16
2.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현황	18
가. 정부 위탁사업 수행 기관	18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18
(2) 기관별 세부현황	19



CONTENTS

나. 정부 위탁사업의 규모	22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22
(2) 기관별 세부현황	23

Ⅲ. 주요 쟁점 분석 / 25

1. 정부 위탁사업의 계약형태 분석	25
가. 개 요	25
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 체결 여부	26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26
(2) 기관별 세부현황	27
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28
(1) 위탁사업비의 명시 여부	29
(2) 위탁수수료의 명시 여부	32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35
마. 소 결	39
2. 정부 위탁사업의 위탁수수료 현황 분석	40
가. 개 요	40
나. 공공기관별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여부 및 규모	41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41
(2) 기관별 세부현황	42
다. 공공기관별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율 수준	44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44
(2) 기관별 세부현황	45



CONTENTS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47
(1) 기관별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	47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 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있는 사례	50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에는 별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없는 사례	53
(4) 참고 :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추가 검토	58
마. 소 결	61
3.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시 수수료 현황 분석	63
가. 개 요	63
나.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여부	64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64
(2) 기관별 세부현황	64
다. 재위탁 시 공공기관의 수수료 수취 수준	66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66
(2) 기관별 세부현황	67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69
마. 소 결	74

IV. 결론 및 시사점 / 75

요 약

1. 개 요

1. 분석 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위탁사업은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의 업무이나, 외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부의 인력 및 예산상 한계를 극복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 본 분석은 위탁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위탁의 계약 형태, 기관별 위탁수수료 규모 및 효율,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율 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함

2. 분석 범위 및 대상

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개념

- ‘위탁’이란 행정기관이 보유한 권한 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나.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의 개념

- ‘위탁수수료’란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재원을 의미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 법령상 위탁수수료의 정의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법령과 지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범위를 유추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탁수수료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는 간접비적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음

다. 분석 대상

(1) 정부 위탁사업의 범위

- 본 분석에서 ‘정부 위탁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해당 공공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책임 아래 이를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2)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2025년 1월 기준 총 3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부사업 현황 및 금액은 관련 결산자료가 확정된 2024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음
-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기관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국가재정법」 상 기금 자체의 관리·운영업무 외에는 별다른 정부 위탁사업이 없는 경우나 공공기관이 기금 자체인 경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업
 -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소나 연구원 등 연구용역 사업만을 주로 직접 수탁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3) 그 밖의 분석 제외 사업의 범위

- 다음 사업 역시 원칙적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보조사업(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정산되는 사업), 출연사업, 기관 고유사업
 - 정부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권한만 부여된 경우(예산 지원 비수반 위탁사업)
- 이에 따라 본 사업의 분석대상 사업은 실제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정부 위탁사업의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II. 현 황

1. 정부 위탁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현행 법 체계에는 정부 위탁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기본적인 제도적 틀은 동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는 민간위탁의 개념, 수탁기관 선정 절차, 위탁계약의 체결 및 재위탁 가능 여부 등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동 법령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수수료의 상한 비율을 규정하여, 계약을 통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 동 법령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기간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위탁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위탁수수료 등 비용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음

라.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지침)

- 동 지침에서는 정부 위탁사업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 위탁비용 산정 방식, 사업 종료 후 잔액의 국고 환수 등 재정 집행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비의 위탁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위탁수수료의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마.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동 계약예규는 정부 위탁사업을 포함한 국가의 계약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격인 예정가격과 계약원가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
- 위탁경비(위탁사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함
- 일반관리비에 관하여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직접 경비가 아닌 간접비적 성격을 가진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2.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현황

가. 정부 위탁사업 수행 기관

- 분석 대상 268개 공공기관 중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41개(52.6%)로 나타남
- 나머지 127개(47.4%)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사업 외 별도 위탁사업이 없거나, 상위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위탁, 자체수입만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분류됨
-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26개 공공기관 중 16개 공공기관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수행기관 수가 가장 많았으며, 해양수산부(13개), 기후에너지환경부(12개), 국토교통부(11개) 등이 그 뒤를 이었음

나. 정부 위탁사업의 규모

- 141개 기관의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은 2024년 기준 총 12조 656억원으로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의 2.6%를 차지함
- 기관별로 전체 매출액 중 위탁사업 비중이 10% 이하인 기관이 73개(51.8%)로 가장 많았으나, 80% 이상인 기관도 12개(8.5%)에 달해 설립 목적과 사업 성격에 따라 수행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 위탁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체 매출액 중 29.5%인 1조 3,897억원을 수탁하여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공사 등의 순이었음

Ⅲ. 주요 쟁점 분석

1. 정부 위탁사업의 계약형태 분석

가. 개 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 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 외에 업무의 내용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 체결 여부

-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전체 기관 중 117개 기관(83.0%)은 위탁사업의 대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12개 기관(8.5%)으로 나타남

-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모든 위탁사업 또는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위탁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용보증기금 등이었음
- 한편,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있었음

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1) 위탁사업비의 명시 여부

- 계약에 위탁사업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111개 기관(78.7%)은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88개 기관(62.4%)은 사업별 위탁사업비 금액까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기관은 12개 기관(8.5%),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사업비 조항 자체가 없는 기관은 18개 기관(12.8%),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비 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기관도 23개 기관(16.3%)으로 확인됨
-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만으로는 재정 규모나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12개 기관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은행 등 18개 기관은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23개 기관은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은 있으나 사업비 총액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위탁수수료의 명시 여부

-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12개 기관을 제외하고도, 위탁계약에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는 기관은 77개 기관(54.6%)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기관 중 2개 기관(1.4%)과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는 기관 중 14개 기관(9.9%)은 실제로는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면서도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임
 -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임
- 한편, 계약 본문에는 없으나 첨부서류에 위탁수수료 금액이 포함된 기관은 31개 기관(22.0%)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본문에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 한국농어촌공사

-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유를 조사한 결과, 법령에서 직접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음
 - 이에 위탁사업 규모가 가장 큰 한국농어촌공사를 사례 기관으로 선정하여, 계약 미체결 사유 및 계약에 준하는 위탁사업 관리 장치가 마련·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음
-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별 법령이 위탁기관 자격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명시적 계약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별 법령에 계약 체결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다면 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 공사는 부처의 승인을 받은 자체 시행계획이나 부처가 마련한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내용과 수수료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계약의 필수 사항을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음
 - 첫째,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 시 부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재한바, 업무 처리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제재할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사만이 수탁 가능한 사업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울 수 있음
 - 둘째, 위탁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무를 규정하는 장치가 없어 위·수탁 당사자 간의 권익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바, 시행계획이나 지침은 성격상 부처의 사업비 확보 및 교부 의무, 성과평가 기준 통보 의무, 위탁 해지 사유 제한 등을 동등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셋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계약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계획은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아, 기관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정부 위탁사업의 중요 부분을 알기 어려울 우려가 있음

마. 소 결

- 정부 위탁사업에서 계약 체결과 사업비·수수료 명시를 규정한 취지는 부처와 공공기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합의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 따라서 위탁기관의 관여는 불가피하더라도 사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위탁사업비, 위탁수수료, 의무와 책임 관계 등 본질적인 사항을 계약을 통해 완결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정부 위탁사업의 위탁수수료 현황 분석

가. 개 요

- 위탁수수료는 수탁 공공기관이 본래의 사업주체인 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함.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외에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며, 이는 크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으로 구분됨

나. 공공기관별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여부 및 규모

-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개 기관 중 76개 기관(53.9%)은 위탁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으며, 전부 또는 일부 수취하는 기관은 65개 기관(46.1%)으로 나타남
-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65개 기관의 전체 위탁수수료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2,246억원이며, 해당 기관들의 평균 위탁수수료 수취액은 34.6억원이었음

다. 공공기관별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율 수준

- 65개 기관의 전체 사업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총 규모는 2024년 기준 6조 186억원이었으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총 2,246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여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3.7%인 것으로 나타남
-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65개 기관의 2024년 기준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기관별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탁수수료율은 대체로 평균인 5.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으나, 10.0%를 초과하는 기관도 2개(3.1%) 존재하였음

- 기관별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2%), (재)우체국금융개발원(11.7%), 국립박물관문화재단(9.1%), 한국어촌어항공단(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1) 기관별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

- 위탁수수료 수취기관 65개 중 27개(41.5%)는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계약 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취하며, 기준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30.8%)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선(예컨대 용역 성격의 위탁사업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사업비의 5~10%, 이윤은 10%까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 성격 및 난이도를 고려한 명확한 산정 기준으로는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 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있는 사례

①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공공기관 :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 국토교통부는 타 부처와 달리 부처 차원에서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 산정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반관리비 요율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대비 하향 조정하여, 직접 수행의 경우 전체 사업비(인건비+경비)의 4.8% 이내에서 수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재위탁(외주)할 경우에는 더 적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였음

②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 동 규정은 법령 별표에 위탁수수료율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총액 대비 7.0~9.0% 범위 내에서 상한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보다 낮게 설정하였음
 - 사업 규모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소규모 사업일수록 높은 일반관리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음
- 다만, 위탁수수료의 정의 및 범위 규정이 별도로 없어 실무상으로는 외주 사업비를 제외한 직접사업비에 6%를 가산하여 일반관리비를 운용하고 있음

③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 한국농어촌공사의 상당수 사업은 산정기준이 없으나, 일부 농어촌정비사업의 재위탁 사례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고시로 위탁관리비의 비율을 정하고 있음
 - 위탁관리비는 외주(재위탁) 사업비의 5~20% 수준으로 정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였음
- 다만, 위탁관리비의 정의 및 범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 근거로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④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위탁사업 관리기준(행정안전부지침)

- 한국조폐공사의 행정안전부 소관 수탁사업은 일반관리비를 기업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최대 6%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실제 계약에서는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 합계액의 6%를 최대치로 계상하고 있으나, 사업 규모나 재위탁 여부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음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에는 별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없는 사례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평균 16.2%의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나타냄. 이에 대해 위탁수수료 산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부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본문에 ‘총 집행한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위탁대가를 지급받도록 근거를 둠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순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자체 재원 확충을 요구하는 정부의 인센티브 방침에 따라 자체수입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위탁수수료율을 높게 설정한 측면이 있음
 - 결론적으로 위탁수수료율 산정에 사업 자체의 특징뿐만 아니라 정부의 운영비 지원 등 기관의 재무적 특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재)우체국금융개발원

-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 평균 11.7%의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나타냄. 이에 대해 개발원은 매년 체결하는 실무 계약서 또는 부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6.4~7.5%의 기관 이윤을 포함한 총 10.9~11.9%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함
- 정부로부터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수입 전액을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기관 특성상, 필수 기능 운영을 위해 타 기관 대비 높은 이윤을 수취한 것으로 보임
 - 위탁수수료율 산정에 사업의 특징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입구조 및 정부의 별도 운영비 지원 여부 등 재무적 특성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4)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추가 검토

- 위탁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는다고 밝힌 76개 기관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수수료가 없으나 직접사업비 내에 간접비 성격의 비용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직접사업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간접비가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편성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어 개별 기관별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마. 소 결

- 정부 위탁사업 수수료 수취 기관 중 상당수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관별로 위탁수수료율의 편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객관적 비교를 저해하고 합리적 수수료율 책정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사업별 특성 및 수행 형태를 고려한 구체적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예컨대 사업비 산정 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접비적 성격의 비용은 일반관리비 등 위탁수수료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통해 간접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실비만 지급하고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 당국 차원의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시 수수료 현황 분석

가. 개 요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탁 공공기관은 사무의 일부를 타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으나, 재위탁 시 원래의 사업주체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 위험이 있으며, 관여 기관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나.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여부

- 분석대상 141개 기관 중 111개 기관(78.7%)은 재위탁 사업이 없으나, 30개 기관(21.3%)은 재위탁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위탁 사업 수가 1개인 기관은 13개(9.2%), 2~3개인 기관은 11개(7.8%)이며, 4개 이상의 사업을 재위탁하는 기관도 6개(4.3%)로 확인됨
-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재위탁이 확인되었으며,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은 4개 이상의 사업을 재위탁 중인 것으로 나타남

다. 재위탁 시 공공기관의 수수료 수준

- 재위탁 사업은 원수탁기관과 재수탁기관 모두 위탁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짐.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과도한 위탁수수료가 지급될 경우, 이는 전체 사업비에서 직접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30개 기관 중 절반인 15개 기관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기관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로는 해양환경공단(38억 9,900만원), 한국조폐공사(11억 1,700만원) 등의 순으로 위탁수수료 규모가 컸음
 - 해양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일부 기관은 직접 수행할 때보다 재위탁 시 수수료율이 오히려 더 높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공단은 재위탁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체 재위탁 사업비의 8.7%인 38억 9,9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이는 재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17개 공공기관의 평균 수수료율인 3.7%보다 높은 수준이며,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평균 수수료율인 5.4%보다도 높은 것임
- 해양환경공단이 타 기관 대비 높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관 재무여건의 취약성을 들 수 있음
 - 공단은 설립 근거법인 「해양환경관리법」 상 정부로부터 기관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출연·출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단은 위탁수수료를 통해 간접비 성격의 운영원가를 충당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관리 책임만 부담하는 재위탁 사업에 대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사업 수행 주체와 수취 구조 간의 괴리를 유발할 수 있음

마. 소 결

- 재위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산정 시 해당 공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수행사업 대비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재위탁 사업 여부에 대해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기관에 따라서는 일부 직접 수행 또는 재위탁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Ⅳ. 결론 및 시사점

□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계약 형태와 관련하여,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둘째,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및 요율과 관련하여, 현재 기관 간 위탁수수료율에 큰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명확한 산정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위탁수수료 관련 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율과 관련하여, 현재 재위탁 사업으로부터 오히려 더 높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재위탁 시 원수탁기관(공공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정부 위탁사업은 실무상 부처별·기관별로 운영상의 편차가 아직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으로, 이는 상당 부분 정부 위탁사업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 부재한 것 역시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에 관련 제정법률안(「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정부 위탁사업은 본래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외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정부의 인력 및 예산상 한계를 극복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이 정부 대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유연하게 확장해 온 현대 행정국가의 필연적인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 위탁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책임성’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위탁사업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우선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마땅히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이다.¹⁾ 이후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명백히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탁 운영방식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두 번째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분석은 이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분석으로서, 이미 공공기관이 국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 사업 영역에 대해, 그 운영방식이 여전히 합리적이고 정부 전체적인 견지에서 재정 운용 상의 책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해당 사업이 정부 위탁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의 논의가 거시적인 정부 위탁의 당위성에 관한 논의라면, 본 분석은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행해지는 ‘어떻게 정부 위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위탁 운영 차원의 제도적 검증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 즉, 일차적으로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이 공공기관에 위탁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책임성을 갖고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원점에서의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위탁수수료는 정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라 볼 수 있다. 만약 행정 위탁에 수반되는 수수료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이는 외부 기관 위탁을 통해 확보하려 했던 행정적 효율성을 재정적 비효율성으로 완전히 상쇄시키는 모순을 초래한다. 따라서 위탁수수료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정부의 직접 수행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으로 수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며, 동시에 그 산정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재정의 합리적 운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제도적 핵심이 되는 위탁수수료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① 위탁 및 수수료에 관한 계약형태와 ② 기관별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및 요율 현황, ③ 제3의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율 현황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위탁’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권한 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책임 아래 해당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은 크게 ‘일반적 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위탁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수탁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 아래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역시 행정기관이므로 행정체계 내부에서 권한이 재배분되는 구조이다.

반면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조직 외부의 주체가 행정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위탁과 구별된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상의 위탁 및 민간위탁 규정]

조문	내 용
제2조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조직법」 상 행정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맡기는 경우 이는 일반적 위탁이 아니라 민간위탁의 범주에 해당한다. 다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민간기업과는 차별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기고, 해당 공공기관은 자신의 명의로 책임 아래 이를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형식상 민간위탁에 해당하지만, 공공성·책임성·투명성 확보가 특히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²⁾

한편 정부 위탁사업은 단순한 용역계약과는 구별된다. 일반 용역계약이 계약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다면, 정부 위탁사업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행정사무의 수행이라는 공적 기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탁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 재무적 관점뿐 아니라 제도적·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의 개념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위탁수수료'란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해당 기관이 수취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탁수수료는 전체 사업비 중 해당 사업의 필수적인 수행을 위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직접비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위탁수수료의 정의나 포함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그 범위를 유추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³⁾ 하고 있으나, 위탁수

2) 공공기관은 「정부조직법」 상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위탁은 민간위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해당 공공기관의 명의로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수료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지침) : 해당 지침 역시 위탁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민간위탁사업비의 위탁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③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기본적으로 위탁경비(위탁사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하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해서는 투입원가에 근거한 산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라고 규정⁴⁾함으로써 사업의 직접 경비가 아닌 간접비적 성격을 가진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 역시 투입원가가 아닌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간접비적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어, 과도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설정을 제한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 법령과 지침은 위탁사업의 직접비용 외 간접비용 및 이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한을 두어 과도한 계상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본 분석에서 정의한 위탁수수료의 개념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위탁수수료를 위 분류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위탁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독점적 영업활동을 보장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 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받음으로써 수취하는 독점 수수료⁵⁾와는 다른 개념이다. 독점 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⁶⁾를 말하며, 국가·지자체가 직접 징수하지 않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탁의 대가로 정부가 지급하는 전체 사업비 내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수탁 대가를 의미하는 본 분석의 위탁수수료와는 차이가 있다.

다. 분석 대상

(1) 정부 위탁사업의 범위

첫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공공기관에 직접 위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위탁사업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은 법적 근거, 재정 구조, 집행 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둘째, 계약서 작성이나 수수료 수취 여부, 또는 위탁·용역·대행 등 실무상 쓰이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닌 정부의 사업을 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즉, 형식적인 계약 구조나 용어보다는 근거 법령, 계약서의 내용, 사업 형태 등 실질적인 운영 성격에 따라 위탁사업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상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2) 분석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분석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분석대상 공공기관은 2025년 1월 지정 기준 공공기관 총 3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세부사업 현황 및 금액은 관련 결산자료가 확정된 2024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다.

5)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2014

6) 예컨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수수료(검사·검증),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수수료(시험·조사·검정), 한국거래소의 증권거래수수료(거래서비스), 한국공항공사의 운항수수료·여객수수료(운항·운송) 등을 들 수 있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2014)

둘째, 「국가재정법」상 기금 자체의 관리·운용업무 외에는 별다른 정부 위탁사업이 없는 경우나 공공기관이 기금 그 자체인 경우⁷⁾에는 원칙적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기금 자체의 단순 관리·운용업무 뿐만 아니라, 기금 내의 특정 사업의 수행을 실질적으로 함께 위탁한 경우에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⁸⁾ 또한 공공기관이 기금 그 자체인 경우라도 기금 외 별도의 계정 등을 통해 특정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셋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업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그 사업의 수행에 있고,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조가 아니라 별도의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통해 운영비를 편성받는 등 여타 위탁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은 각 기관의 고유 사업으로 보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해당 기관이 본래의 사업 외에 별도로 위탁받은 부수적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넷째,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은 제외하였다. 해당 기관은 병원회계의 특성상 진료수입 중심의 자율적 재정운영 구조를 기본으로 정부 위탁사업이 기관의 재정 운영 속에 흡수되어 고유사업과 위탁사업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국립암센터의 경우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가 보건 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포함하였다.

다섯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대신 기술평가관리비를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타 위탁기관과는 사업의 특성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관리전문기관 역시 원칙적으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되, 통상적인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일반 위탁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포함하였다.

여섯째, 연구소나 연구원 등과 같이 연구용역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정부 위탁 사업 대부분이 이러한 직접 연구용역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⁹⁾ 등의 경우도 제외하였다. 다만,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 외의 위탁사업이 있

7)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금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라 해당 기금의 고유사업이 된다. 다만, 본 분석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금 외에 별도 계정을 통해 특정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8)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근로복지기금 등의 경우, 해당 결정권, 수행권 자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위탁된다.

9)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기관과 정책 및 인문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그 외 각 부처 소속 연구기관으로 나뉜다.

는 기관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감안할 경우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총 331개 기관 중 268개 기관이다. 분석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분석 제외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기관)

구분	기관명	기관 수
기금의 단순 운용·관리	(제외 기관 없음 : 모든 기관 별도의 사업 있음)	0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0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15
연구개발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
연구소 등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기업벤처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3
기타 연구용역사업 외 수탁사업이 없는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무역안보관리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5
분석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계		63
분석 대상 공공기관 계		268

(3) 그 밖의 분석 제외 사업의 범위

첫째, 보조사업이나 출연사업, 기관 자체의 고유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보조사업은 개념상 정부의 사업이 아닌 기관 자체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지원(보조금)하는 것으로, 엄밀히는 정부의 사업을 기관이 대신 수행해 주는 위탁사업과 사업 주체 측면에서 구분된다. 출연사업은 국가의 사업을 기관이 대행한다는 점에서 위탁사업과 유사하나,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지원(출연금)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약된 바에 따른 사업 성과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위탁사업과 개념상 구분된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의 비목이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형식이라도 근거 법령 및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위탁사업의 실질을 가진 사업의 경우에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출연금·보조금·위탁사업비의 비교]

구분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비
개념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근거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지급	국가가 지자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
법적 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지원대상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비목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자료: 박기영(2018), 「국가재정」 및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정부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이 권한만 부여된 경우, 이른바 예산 지원 비수반 위탁사업 역시 제외하였다. 해당 사업의 경우, 민간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통해 사업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로 인해 본 사업의 분석대상 사업은 실제 해당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정부 위탁사업의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분석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정부 위탁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재정적 규모, 운영상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본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직접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는 331개 전체 공공기관에 각각 요청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회신한 응답자료를 기본자료로 하였다. 따라서 분석 과정에서 기관 간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료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보고서 및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 국회 등의 분석보고서를 일부 보충적으로 참고하였으며, 해당 기관의 사업 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응답 상의 한계로 인해 분석 오차가 다소 존재할 수 있다.

둘째, 금액 관련 자료는 각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를 참고하였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거친 재무정보로서 신뢰성이 높으며,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탁사업 관련 수익, 비용, 수수료 수입 등은 감사보고서 중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공공기관이 회신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셋째, 위탁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구조는 관련 법령, 시행령, 고시 및 부처지침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이 적절한 위탁에 해당하는지, 위탁범위와 책임 구조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필요시 기관별 사례를 선별하여 사업 운영 방식, 성과관리 체계, 책임성 확보 장치 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는 단순 수치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현황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정부 위탁사업 관련 법령 및 주요 지침

「정부조직법」은 제2조제1항¹⁰⁾¹¹⁾은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 부·처·청의 설치 근거와 사무 관장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행정권한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¹²⁾

한편, 같은 법 제6조¹³⁾에서는 소관사무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부여된 행정권한을 다른 기관이 대신 수행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우리 현행법 체계에서는 정부 위탁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바,¹⁴⁾ 현재 정부 위탁사업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은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10)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11) 해당 규정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96조를 확인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2) 우미형,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6집제3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8. 2.

13)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4) 이와 관련하여 현재 법률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안(「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18호))이 제출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다.

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령 규정이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민간위탁의 개념, 수탁기관 선정 절차, 위탁계약의 체결 및 재위탁 가능 여부 등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재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탁수수료의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수수료의 상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계약을 통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규정에서는 용역의 성격과 난이도,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8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동 규칙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계약기간뿐 아니라 위탁수수료 등 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계약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위탁수수료 등 비용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략)
-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라.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지침)

기획재정부는 매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의 예산 집행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동 지침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부적인 예산 집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절차, 위탁비용 산정 방식, 사업 종료 후 잔액의 국고 환수 등 재정 집행과 관련된 주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위탁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민간위탁사업비의 위탁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위탁수수료의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상 수입액을 고려하여 예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1. 적용범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소관)**」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

10-3. 세부지침

가. 사업자 선정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한다.

나. 위탁경비의 산정

- 개별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 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다. 구분계리 및 잔액 국고 환수

-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10-4. 기타 조치사항

나.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중략)

2. 업무위탁 수수료 초과 집행시 사전협의

- 기금업무위탁(자산운용관련 제외)과 관련된 수수료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 채권추심수수료, 위탁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마.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정부 위탁사업을 포함한 국가의 계약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격인 예정가격¹⁵⁾과 계약원가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기본적으로 위탁경비(위탁사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하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해서는 투입원가에 근거한 산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서는 산출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바탕으로 일정률을 곱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관리비에 관하여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직접 경비가 아닌 간접비적 성격을 가진 비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칙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제1절 총칙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위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여, 사무실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정부 위탁사업 수행 기관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분석대상 268개 공공기관 중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41개로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127개(47.4%) 공공기관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주로 보조·출연사업 외에 별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위탁사업을 수행하더라도 타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의 지위에 있어 정부가 아닌 상위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위탁받은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코레일테크(주))였다. 또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아 자체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도 있었다.

한편, 별도의 정부 위탁사업이 없는 127개 기관 중 한국저작권보호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재)축산환경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은 2025년부터 기존 보조사업 중 일부가 정부 위탁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분석은 자료가 확보된 2024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기관들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관으로 분류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기관명 / 비고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함	141	52.6	-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않음	127	47.4	*2025년에는 122개 기관으로 감소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위탁 사업만 있는 기관)	1	0.4	코레일테크(주)
(예산 지원 비수반 위탁만 있는 기관)	3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계 (전체 분석대상 기관)	268	100.0	-

주: 공공기관 현황은 2025년, 사업별 현황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세부현황

기관별 정부 위탁사업 수행 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전체 26개 공공기관 중 16개 공공기관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행기관 수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의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이 포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관도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12개로 공공기관에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국토교통부 11개, 문화체육관광부 각 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고용노동부 8개 등 순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소관 공공기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31개 공공기관 중 29.0%인 9개 기관에서만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다른 22개 기관은 수행 중인 정부 위탁사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외교부, 재외동포청, 국방부, 기상청 등 7개 부처는 소관 공공기관 중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현황(부처별)]

(단위: 개 기관, %)

소관위	소관부처	분석대상 기관 수(A)	정부 위탁사업 수행(B)	B/A
법제사법 위원회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1개)	33.3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3개)	100.0
	공정거래 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개)	100.0
	금융위원회	7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3개)	42.9
	국무조정실	1	(0개)	0.0

(단위: 개 기관, %)

소관위	소관부처	분석대상 기관 수(A)	정부 위탁사업 수행(B)	B/A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3	한국조폐공사 (1개)	33.3
	국가 데이터처	1	(0개)	0.0
	기획예산처	1	한국재정정보원 (1개)	100.0
	관세청	1	(0개)	0.0
교육위원회	교육부	8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5개)	62.5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6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 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재)한국우편사 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 원자력의학원 (8개)	50.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2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50.0
	원자력안전 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3개)	100.0
외교통일 위원회	외교부	2	(0개)	0.0
	통일부	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개)	50.0
	재외동포청	1	(0개)	0.0
국방위원회	국방부	2	(0개)	0.0
	방위사업청	1	국방기술품질원 (1개)	100.0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3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개)	100.0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개)	100.0
	경찰청	1	한국도로교통공단 (1개)	100.0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개)	100.0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3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게임물관리위원회, 국 립박물관문화재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 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9개)	29.0
	국가유산청	1	국가유산진흥원 (1개)	100.0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제식물검역인 증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개)	45.5
	해양수산부	16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개)	81.3
	농촌진흥청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개)	100.0

(단위: 개 기관, %)

소관위	소관부처	분석대상 기관 수(A)	정부 위탁사업 수행(B)	B/A
	산림청	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4개)	80.0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부	17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35.3
	중소벤처 기업부	9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개)	55.6
	지식재산처	5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4개)	80.0
보건복지 위원회	보건복지부	26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대구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16개)	61.5
	식품의약품 안전처	5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5개)	100.0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개)	66.7
	기후에너지 환경부	30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12개)	40.0
	기상청	1	(0개)	0.0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	28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1개)	39.3
성평등 위원회	성평등 가족부	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개)	100.0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268	141	52.6

주: 공공기관 현황은 2025년, 사업별 현황은 2024년 기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정부 위탁사업의 규모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41개 기관의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은 2024년 기준 총 12조 656억원으로 해당 기관 전체 매출액(466조 347억원)의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전체 매출액(A) ¹⁾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B)	비중(B/A)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141개)	466,034,723	12,065,579	2.6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141개 기관 중 각 기관의 전체 매출액 중 정부 위탁사업 매출액이 10% 이하인 기관은 73개 기관(51.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10% 초과 20% 이하인 기관은 19개 기관(13.5%), 20% 초과 40% 이하인 기관은 14개 기관(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이 정부 위탁사업에서 나오는 기관도 12개 기관(8.5%)에 달했다. 이는 각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 성격에 따라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수행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전체 매출액 대비 정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2024년)]

(단위: 개 기관, %)

정부 위탁사업 비중(금액 기준)		기관 수	비율
매출액 ¹⁾ 대비	10% 이하	73	51.8
	10% 초과 20% 이하	19	13.5
	20% 초과 40% 이하	14	9.9
	40% 초과 60% 이하	12	8.5
	60% 초과 80% 이하	11	7.8
	80% 초과	12	8.5
	소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수행하지 않음		127	
계 (전체 분석대상 기관)		268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세부현황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41개 기관 중 위탁사업 규모가 큰 순서대로 상위 20개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탁사업비 총액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체 매출액 4조 7,103억원 중 29.5%인 1조 3,897억원을 정부 위탁사업 수탁을 통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단이 1조 290억원, 한국장학재단 9,802억원, 한국철도공사 8,490억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158억원 등의 순이었다. 141개 기관의 평균 정부 위탁사업 규모는 856억원이었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통한 매출액 현황 : 위탁사업 규모 상위 20개 기관]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전체 매출액 (A) ¹⁾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B)	비중(B/A)
1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4,710,321	1,389,736	29.5
2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1,263,263	1,029,005	81.5
3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5,366,056	980,175	18.3
4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6,528,145	849,012	13.0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27,311	715,832	98.4
6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725,902	690,449	95.1
7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70,114,038	656,735	0.9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653,570	555,233	85.0
9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2,583	502,583	100.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26,532,709	416,033	0.3
11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8,694,618	358,935	4.1
12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1,833,216	347,886	19.0
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부	1,252,909	301,449	24.1
14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917,699	268,509	29.3
15	국립공원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551,341	235,434	42.7
16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부	342,652	208,667	60.9
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4,676	201,212	98.3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15,572,240	181,457	1.2
19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240,091	132,951	55.4
2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153,612	116,254	75.7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141개) 평균			3,305,211	85,571	2.6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정부 위탁사업의 계약형태 분석

가. 개 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16)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같은 행정기관은 공공기관 등 개념상 민간수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민간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등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특정 사업을 일정한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가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보조사업이나 출연사업과 구별된다. 따라서 수탁기관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업무의 내용, 수행 기준 및 분쟁 발생 시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계약, 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 체결 여부

본 분석에서는 각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상위 위탁기관인 정부 부처와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참고로 실무상 정부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약은 계약서, 협약서 등 다양한 명칭과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와 형식에 관계없이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되는 이러한 계약·협약이 계약의 실질을 띠고 있으면 모두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분석대상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중 117개 기관(83.0%)은 위탁사업의 대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12개 기관(8.5%)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전부 또는 대부분의 위탁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관도 12개 기관(8.5%)으로 확인되었다. 위탁사업은 특정 사업의 수행 범위, 비용,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이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일부 기관에서 계약 체결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제도 운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사업 관리 방식에 기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 체결 여부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¹⁾	12	8.5
일부 사업만 계약을 체결함	12	8.5
계약을 체결함 ²⁾	117	83.0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1) 사업수 기준 20% 미만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2)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세부현황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모든 위탁사업 또는 사업수 기준 80% 이상 대부분의 위탁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 체결 여부 : 기관별 세부현황]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전체 위탁사업 수행기관 수	그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¹⁾	일부 사업만 체결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3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교육위원회	교육부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행정안전 위원회	경찰청	1	한국도로교통공단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9	-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5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전체 위탁사업 수행기관 수	그 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¹⁾	일부 사업만 체결함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부	6	한국석유공사	-
	중소벤처 기업부	5	-	기술보증기금
보건복지 위원회	보건복지부	16	국립암센터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고용노동부	8	근로복지공단	-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	1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부처		60	-	-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2	12

주: 1)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용은 사업의 위·수탁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¹⁷⁾은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비용 및 수수료(일반관리비 및 이윤), 위탁기간 등 실질적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전체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관의 사업별 계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해당 계약의 내용에 ① 사업별 위탁사업비, ② 수탁기관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명시되어 계약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본 분석에서는 동일 기관 내에서도 위탁사업마다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위탁사업비의 명시 여부

① 전체 공공기관 현황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체결되는 계약에 위탁사업비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개 중 111개 기관(78.7%)은 위탁사업비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88개 기관(62.4%)은 계약에 사업별 위탁사업비 금액까지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구조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위탁사업과 관련된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기관은 12개 기관(8.5%),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 본문에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기관은 18개 기관(12.8%)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비 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기관도 23개 기관(16.3%)으로 확인되었다.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란, 계약에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한다’, ‘○○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로 정한다’, ‘위탁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지원하여야 한다)’라는 원칙만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 기관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만으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나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기관이므로 계약 내용의 구체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 위탁사업비 명시 여부]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¹⁾		12	8.5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없음		18	12.8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있음	사업비 관련 조항은 있으나 금액은 명시하지 않음	23	16.3
	사업비 관련 조항이 있으며 사업비 금액도 명시	88	62.4
	소계	111	78.7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1)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1.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기관별 세부현황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12개 기관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은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같이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기관이 총 18개 있었다. 또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88관광개발(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3개 기관은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은 있으나 사업비 총액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간 계약 작성 방식과 위탁사업비 명시 수준에는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 위탁사업비 명시 여부(기관별 세부현황)]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계약 미체결 기관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없음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있으나, 구체적 금액 명시하지 않음
법제사법 위원회	법무부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위원회	국가보훈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산업은행	-
교육위원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보육진흥원	-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외교통일 위원회	통일부	-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행정안전 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소방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조사협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부	한국석유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중소벤처 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계약 미체결 기관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없음	위탁사업비 관련 조항 있으나, 구체적 금액 명시하지 않음
보건복지 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기후에너지 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노동 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	-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계		12	18	23

주: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위탁수수료의 명시 여부

① 전체 공공기관 현황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체결되는 계약에서 위탁수수료의 명시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관의 계약에서 위탁수수료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개 중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12개 기관을 제외하고도, 계약에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는 기관은 총 77개 기관(54.6%)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기관(12개) 중 2개 기관(1.4%)과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는 기관(77개) 중 14개 기관(9.9%)은 실제로는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면서도 계약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약 본문에는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으나 산출내역서나 과업지시서 등 첨부서류에 위탁수수료 금액이 포함된 기관은 31개 기관(22.0%)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 본문에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소수로 총 21개 기관(14.9%)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근거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기관이 3개 기관(2.1%), 수수료 상한선 규정만 둔 기관이 10개 기관(7.1%)으로 나타났다. 계약 본문에 위탁수수료의 정확한 금액 또는 수수료율을 명시한 기관은 총 8개 기관(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 위탁수수료 명시 여부]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¹⁾	위탁수수료 수취함		2	1.4
	위탁수수료 수취 안함		10	7.1
	소계		12	8.5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 없음	위탁수수료 수취함		14	9.9
		(나라장터 표준계약서 사용)	8	5.7
	위탁수수료 수취 안함		63	44.7
	소계		77	54.6
계약 본문에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은 없으나, 첨부서류(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는 금액 있음			31	22.0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 있음	구체적 금액 미규정	근거 규정만 둠	3	2.1
		상한선 규정만 둠	10	7.1
		소계	13	9.2
	구체적 금액 규정	받지 않는다고 명시	1	0.7
		수수료율 명시	5	3.5
		수수료금액 명시	2	1.4
		소계	8	5.7
	소계		21	14.9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1) 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기관

1.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기관별 세부현황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위탁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2개 기관이었으며,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인천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6개 기관¹⁸⁾이었다.

한편, 특이할만한 점은 일부 공공기관(8개)¹⁹⁾의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 계약을 진행한 결과, 계약 본문에는 위탁수수료가 표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²⁰⁾에 따른 표준계약을 활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처럼 조달청 표준계약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산출내역서 공개 등을 통해 위탁수수료가 계약 과정에 투명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이 향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탁사업 계약의 내용 :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전체 기관 현황]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관 중	
		계약 미체결 기관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 없음 (단, 나라장터 표준계약서 사용기관 제외)
교육위원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18) 다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정부 위탁사업 계약을 진행한 결과, 계약 본문에는 위탁수수료가 표시되지 않은 8개 기관은 제외한 것이다.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8개 기관

2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된 전자적 형태의 계약서(이하 “전자계약서”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관 중	
		계약 미체결 기관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 없음 (단, 나라장터 표준계약서 사용기관 제외)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업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제식물검 역인증원
	해양수산부	-	인천항만공사
계		2	6

주: 1) 단, 나라장터 표준계약서 사용기관(8개)은 제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 한국농어촌공사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24개 기관(일부 미체결 기관 12개 포함)을 대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 보면, 가장 많은 경우는 법령에서 직접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 총 24개 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9개 기관이 이러한 사유를 제시하였다.

[정부 위탁사업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기관 응답 기준)]

(단위: 개 기관)

구분	기관명
법령에서 직접 위탁받은 사업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석유공사 (19개)

(단위: 개 기관)

구분	기관명
법령해석 차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¹⁾ (1개)
기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²⁾ (1개)
(이유 미설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술보증기금 (3개)
계	24

주: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은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라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

2) 비목상 국가보조금의 비목이므로 별도의 계약 없이 승인공문으로 같음하였다는 입장

1. 밑줄은 모든 또는 대부분(사업수 기준 80% 이상)의 정부 위탁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2개 기관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중 위탁사업 규모가 가장 큰²¹⁾ 한국농어촌공사를 사례 기관으로 선정하여, 계약 미체결 사유 및 계약에 준하는 위탁사업 관리 장치가 마련·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 4조 7,103억원 중 29.5%인 1조 3,897억원이 정부 위탁사업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 본 사업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취한 위탁수수료는 전체 정부 위탁사업비의 5.6%인 783억원 수준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관련 주요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소관 부처	종류	전체 사업	정부 위탁사업			
			매출액(A) ¹⁾	매출액(B)	(B/A)	위탁수수료(C)	(C/B)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710,321	1,389,736	29.5	78,251	5.6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사업비 규모 뿐만 아니라,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2024년 기준 1,977억원) 또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계약 미체결 사유로 해당 정부 위탁사업들이 일반적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아닌 개별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정부 위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²²⁾를 두는 사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계약에 준하여 이미 위탁기관의 자격, 업무의 내용, 위탁 절차 등을 이미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것처럼 별도의 명시적 계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 위탁의 일반적 규정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해당 규정에 따른 위탁뿐만 아니라 타 법령에 따른 위탁의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적용²³⁾된다는 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시한 개별 근거 법령에 따르더라도 해당 법령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어 계약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 예컨대 공사의 설립 근거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경우, 정부가 공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둔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35조(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2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정부 위탁사업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위탁 사업비 규모 및 위탁수수료율, 위탁기간, 업무수행 상 수탁기관의 의무, 의무 위반 시 책임 등의 핵심 사항을 계약에 준하도록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해당 위탁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내용,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규모 등을 대부분²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자체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별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계약이었다면 포함되었을 필수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의 내용 및 제재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예컨대 수탁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 처리가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시행지침에 위반될 경우, 위탁기관(농림축산식품부)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²⁵⁾ 특히 법령상 위탁근거가 명확하여 한국농어촌공사만이 수탁할 수 있는 일부 사업²⁶⁾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처가 어떠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② 위·수탁 당사자의 하나인 위탁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 공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업무의 수행방법을 정하는 시행지침은 그 성격상 위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는 상당수의 위탁 계약이 위탁기관에게도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확보 및 교부 의무, 성과평가 시 기간 및 기준 통보 의무, 위탁 해지 사유의 제한 등의 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③ 그 밖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위탁계약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계획은 공개 대상이 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부 위탁사업의 중요 부분을 알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²⁷⁾

24) 일부 예외가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수탁한 측량, 설비, 공사감리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25)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타 기관의 경우, ① 위탁기관의 감사 실시 이후에 ②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③ 시정조치의 종류로는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및 변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

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가 대표적이다.

마. 소 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 위탁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 및 사업비를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위·수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성립하는 원칙에 맞게 부처와 공공기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기관인 부처의 관여는 불가피하겠지만, 그 관여 역시 사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정부 위탁사업은 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의무와 책임 관계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완결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도 위·수탁 당사자 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는 정부 위탁사업 외에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에 직접 위탁하는 사업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그 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위탁 계약의 불완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위·수탁기관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규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7)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비록 연도별 시행계획은 아니나 개별 사업별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 등을 공사 홈페이지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농업e지(<https://www.nongupez.go.kr/>) 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국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본래 위탁 계약에 포함되었어야 할 사항 중 사업내용, 수행체계, 전체 사업비 규모, 시행기준 등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 개 요

위탁수수료는 수탁 공공기관이 본래의 사업주체인 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정부 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의 고유사업이 아니지만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사무의 일부를 맡겨 수행하는 방식의 사업이므로, 수탁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외에 위탁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한다. 이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²⁸⁾에서는 수탁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위탁수수료는 크게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관리비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기업의 유지·관리 및 영업활동 등에 소요되는 간접경비를 의미한다. 반면 이윤은 계약 수행에 따른 수탁기관의 적정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별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여부 및 규모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개 기관 중 76개 기관(53.9%)²⁹⁾은 모든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를 전혀 수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를 수취하는 기관은 30개 기관(21.3%)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를 수취하는 기관은 35개 기관(24.8%)으로 조사되어, 총 65개 기관(46.1%)이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위탁수수를 전혀 수취하지 않음	76	53.9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수수를 수취함	35	24.8
모든 위탁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를 수취함	30	21.3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1) 해당 기관의 2024년 기준 '전체 정부 위탁사업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수수를 수취하는 정부 위탁사업비의 합계액'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매출액 기준으로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를 수취하고 있는 65개 기관의 전체 정부 위탁사업(6조 6,336억원) 대비 위탁수수를 수취하는 사업(6조 186억원)의 비중은 90.7%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이 수취한 전체 위탁수수의 규모는 2024년 기준 총 2,246억원이었다.

29) 34페이지의 표와 비교하면, 해당 표에 나와 있는 ① 계약 미체결 기관 중 위탁수수를 수취하지 않은 10개 기관, ②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위탁수수료 관련 조항이 없는 기관 중 위탁수수를 수취하지 않은 63개 기관, ③ 계약서에 위탁수수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1개 기관 외에도, ④ 위탁수수료 수취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3개 기관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A)	A 중 위탁수수료 수취 사업 매출액(B)	비중 (B/A)	전체 위탁 수수료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141개) 계	12,065,579	6,018,600	49.9	224,561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기관(65개) 계	6,633,584		90.7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세부현황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65개 기관 중 위탁수수료 총액 규모가 큰 순서대로 상위 20개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조 3,897억원 규모의 정부 위탁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전체 수취 규모는 모든 기관 중 가장 많은 783억원이었다.

이어 창업진흥원³⁰⁾이 293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69억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이 135억원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은 모든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한 기관이었다.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전체 65개 기관의 평균 위탁수수료 수취액은 34.6억원이었다.

30) 단, 창업진흥원은 2025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다(위탁사업비에는 직접사업비만 반영).

※ 2025년 기준 운영비 지원액 : 328억원(인건비 지원액 215억원 포함)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여부 : 전체 위탁수수료 규모 상위 20개 기관]

(단위: 백만원, %)

연번	기관명	소관부처	전체 위탁 사업비 계	위탁수수료 수취사업의 비중	전체 위탁 수수료 계
1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1,389,736	99.9	78,251
2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690,449	100.0	29,337
3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268,509	100.0	16,943
4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2,583	100.0	13,456
5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347,886	94.4	10,851
6	국립공원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235,434	99.3	8,999
7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108,941	85.2	7,341
8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555,233	99.2	6,639
9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754	100.0	6,629
10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청	102,652	99.7	6,046
11	한국산업은행	금융위원회	656,735	100.0	5,879
12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부	208,667	96.4	4,905
13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181,457	61.8	4,808
14	한국어촌여항공단	해양수산부	48,619	100.0	4,199
15	한국수자원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49,759	100.0	2,241
1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처	30,240	100.0	1,692
17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부	112,714	26.5	1,472
18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24,224	100.0	1,392
19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779	66.5	1,361
20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청	7,020	100.0	1,135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기관(65개) 평균			102,055	90.7	3,455

주: * 단, 창업진흥원은 2025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음에 따라,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직접사업비만 위탁사업비에 반영)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공공기관별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율 수준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65개 기관의 평균 위탁수수료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본 분석에서 평균 위탁수수료율이란 해당 기관의 ‘전체 정부 위탁사업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의 사업비 합계액’ 대비 ‘전체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들 65개 기관의 전체 사업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정부 위탁사업의 총 규모는 6조 186억원이었으며, 해당 사업으로부터 총 2,246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여 평균 위탁수수료율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 위탁사업을 통한 매출액(A)	A 중 위탁수수료 수취 사업 매출액(B)	전체 위탁수수료 계(C)	평균 위탁수수료율 (C/B)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기관(65개) 계	6,633,584	6,018,600	224,561	3.7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기관별로 평균 위탁수수료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2.5% 초과 5.0% 이하인 기관은 24개(3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0.0% 초과 2.5% 이하인 기관은 20개(30.8%)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10.0%를 초과하는 기관도 2개(3.1%)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위탁사업으로부터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이 상당수 5.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율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함 (평균 위탁수수료율) ¹⁾	10.0% 초과	2	3.1
	7.5% 초과 10.0% 이하	5	7.7
	5.0% 초과 7.5% 이하	14	21.5
	2.5% 초과 5.0% 이하	24	36.9
	0.0% 초과 2.5% 이하	20	30.8
	소계	65	100.0
위탁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음		76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주: 1) 해당 기관의 2024년 기준 '전체 정부 위탁사업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의 매출(사업비) 합계액' 대비 '전체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세부현황

한편,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평균 위탁수수료율 상위 20개 기관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10.0%를 초과한 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16.2%) 및 (재)우체국금융개발원(11.7%) 등 2개 기관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국립박물관문화재단(9.1%), 한국어촌어항공단(8.6%), 한국항로표지기술원(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율 현황 : 평균 위탁수수료율 상위 20개 기관]

(단위: 백만원, %)

연 번	기관명	정부 위탁사업	A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위탁사업		
		매출액 계 (A)	매출액 계 (B)	위탁수수료 계(C)	평균 위탁 수수료율 ¹⁾ (C/B)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7,020	7,020	1,135	16.2
2	(재)우체국금융개발원	56,754	56,754	6,629	11.7
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926	1,926	175	9.1
4	한국어촌어항공단	48,619	48,613	4,199	8.6
5	한국항로표지기술원	3,666	3,666	303	8.3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340	250	20	8.0
7	해양환경공단	108,941	92,815	7,341	7.9
8	한국자산관리공사	268,509	268,509	16,943	6.3
9	국가유산진흥원	102,652	102,342	6,046	5.9
10	한국도로공사	24,224	24,224	1,392	5.7
11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762	762	43	5.7
12	한국농어촌공사	1,389,736	1,389,681	78,251	5.6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0,240	30,240	1,692	5.6
14	한국수산자원공단	16,384	16,384	913	5.6
1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430	2,430	133	5.5
16	한국조폐공사	20,508	20,508	1,119	5.5
17	한국발명진흥회	5,159	5,159	281	5.5
1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768	1,768	95	5.4
1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900	352	18	5.1
2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98	198	10	5.1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기관(65개) 평균		102,055	92,594	3,455	3.7

주: 1) 해당 기관의 2024년 기준 '전체 정부 위탁사업 중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위탁사업의 매출액 (사업비) 합계액' 대비 '전체 위탁수수료 합계액'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이처럼 기관별로 위탁수수료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위탁수수료율의 산정기준이 없거나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의 재무상황 등 사업 외적인 요인이 위탁수수료율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위탁수수료 부과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기관별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

우선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전체 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산정기준을 조사³¹⁾한 결과,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이 계약 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였다고 응답한 기관이 27개로 41.5%를 차지하였다. 반면, 수수료 산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³²⁾을 산정기준으로 따랐다고 응답한 곳이 20개(30.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개별 법령에 수수료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는 기관이 2개(3.1%), 부처에서 수수료 관련 기준을 정한 기관이 11개(16.9%), 기관 자체 지침으로 기준이 있는 기관이 3개(4.6%) 등이었다.

다만, 별도의 산정기준을 제출하지 않은 27개 기관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수수료의 상한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참고로 본 분석에서는 동일 기관 내에서도 위탁사업마다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2) 같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의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현황(기관 응답 기준)]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별도의 수수료 산정기준 없음	별다른 산정기준이나 계약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운영	22	33.8
	별다른 산정기준 없이 계약에 따라 운영	5	7.7
	소계	27	41.5
수수료 산정기준 있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0	30.8
	개별 법령상 별도 규정 있음	2	3.1
	부처에서 정한 별도 지침 있음	11	16.9
	기관 자체적으로 정한 지침 있음	3	4.6
	여러 산정기준 혼용	2	3.1
소계		38	58.5
계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기관)		65	100.0

주: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많은 공공기관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삼았다고 응답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상한을 차등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용역 성격의 위탁사업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사업비의 5~10%, 이윤은 10%까지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은 수수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게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처럼 법령에서 위탁수수료의 상한만을 규정한 것은, 사업의 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부 위탁사업의 수수료율을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인정한 취지로도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수수료율의 상한]

사업의 종류		일반관리비의 상한	이윤의 상한
공사	(일반적인 경우)	11%	15%
	시설공사	8%	
제조 및 구매	(일반적인 경우)	(품목별로) 6~14%	25%*
	수입물품의 구매	8%	10%
용역	폐기물 처리·재활용	10%	10%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5%	
	장비 유지·보수	10%	
	기타 용역	6%	

- 주: 1. 해당 상한율은 예단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예단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전체 위탁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적용할 수 있음
 2. 이/탈락 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는 규정이 없으나, 같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재정경제부계약예규인 「예단가격 작성기준」에 규정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수료 설정에 있어 별다른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수수료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별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³³⁾ 역시 위탁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아니나 수탁기관 선정 시 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이나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탁수수료의 설정에도 이러한 요인이 일부 고려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 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있는 사례

다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에 별도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있다고 밝힌 18개 기관 중 주요 기관의 세부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공공기관 :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국토교통부는 대부분의 타 부처와 달리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 산정 근거를 부처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해당 근거 규정인 국토교통부고시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³⁴⁾은 다음과 같이 위탁수수료 산정 시 다양한 요인을 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i) 일반관리비의 요율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대비 하향 조정하였다. 본 지침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³⁵⁾는 성격에 따라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³⁶⁾되는데, 그 중 일반관리비는 직접 수행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4.8% 이내³⁷⁾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재위탁³⁸⁾할 경우에는 더 적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하였다. 재위탁 시 일반관리비는 전체 사업비가 아닌 외주(재위탁) 사업비를 차감한 ‘대행사업관리비’의 4.8% 이내를 수취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대행사업관리비를 외주(재위탁) 사업비의 5~20% 수준으로 정함으로써³⁹⁾ 결과적으로 일반관리비는 직접 수행인 경우보다 적은 비율인 전체 사업비의 0.2~0.8% 이내만을 수취하도록 하였다.

34) 제명에 ‘대행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동 지침 제3조제1호의 정의상 본 규정은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정부 위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 : 법률,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35) 재위탁인 경우에는 ‘대행사업관리비’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6)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제4조제4항 및 별표 1

37) (인건비 + 경비)의 합산액의 5% 이내

38) 동 지침의 용어에 따르면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외주사업’

39) 다만, 대행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 대행사업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3%p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지침 제4조제5항 단서).

iii) 재위탁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작은 규모의 사업일수록 일반관리비를 높게 인정하도록 차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행사업관리비의 차등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⁴⁰⁾ 결과적으로 일반관리비도 이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기관의 규모나 재정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장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본 시행령은 법령에서 직접 위탁수수료율을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총액 대비 7.0%(사업비 500억원 초과 시) ~ 9.0%(사업비 100억원 이하 시)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대비 하향 규정하였다.⁴¹⁾ 그 결과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작은 규모의 사업일수록 일반관리비를 높게 인정하도록 차등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위탁수수료의 정의 규정 및 포함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 구체적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근거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무상 한국수자원공사 소관 위탁사업은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i) 직접사업비만을 대상으로⁴²⁾ ii)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⁴³⁾하여 일반관리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iii) 별도의 이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부분의 기관과 달리 부처와의 위탁계약서 본문에 위탁수수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수수료의 산출 근거를 보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바람직한 사례로 보인다.

40) 사업비 5억원 이하(20.0%) ~ 사업비 1,000억원 초과(5.0%) 등이며, 기준금액 사이의 구간은 직선보간법(직선비례에 따른 차등요율)을 적용한다.

41)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42) 전체 사업비에서 외주(재위탁) 사업비는 제외한 금액

43) 외주(재위탁) 사업비를 차감한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총액의 5.7% 이하

[위탁계약 시 계약서 본문에 위탁수수료를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기관)

구분	전체 위탁수수료 수취 기관 수	위탁계약 시 계약서 본문에 위탁수수료(금액 또는 비율)을 명시함	명시하지 않음
	66	6 (금액 2, 비율 4)	60
기관 수	-	한국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그 밖의 모든 기관

주: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상당수 정부 위탁사업은 별도의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고시로 ‘위탁관리비’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있다.⁴⁴⁾ 이 때의 위탁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에서의 ‘대행사업관리비’와 같이 외주(재위탁) 사업비의 5~2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⁴⁵⁾

다만, ‘위탁관리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포함 범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구체적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정 근거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실무상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정비 위탁사업은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i) 외주(재위탁) 사업비를 차감한 비용만을 대상으로⁴⁶⁾ ii) 인건비와 경비 등 합계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⁴⁷⁾하여 일반관리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iii) 별도의 이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44) 「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7조(위탁관리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탁시행자인 경우로서, 업무를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주용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지급한다.

45) 국토교통부고시와 마찬가지로 외주(재위탁)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사업비 5억원 이하 (20.0%) ~ 사업비 1,000억원 초과(5.0%) 등).

46) (직접비+인건비+경비)에서 외주(재위탁) 사업비는 제외한 금액

47) (직접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4.8% 이하

④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 위탁사업 관리기준(행정안전부지침)

한국조폐공사는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이나 모바일·디지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일부 업무를 수탁받고 있다. 해당 사업을 규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조폐공사 위탁사업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은 일반관리비를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6% 이내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위·수탁계약에서는 일반관리비를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의 합계액의 6%(최대치)로 계상하고 있다. 다만, 사업규모나 재위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⑤ 소 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에 별도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있다고 응답한 19개 기관 중 정부 위탁사업 규모가 큰 주요 기관을 사례 기관으로 선정하여 산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기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위탁수수료 상한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반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에 사업규모, 수탁기관의 규모, 재위탁 여부 등을 위탁수수료 산정 시 고려한 경우는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해당 19개 기관은 일반관리비 외에 이윤은 대부분⁴⁸⁾ 수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외에는 별다른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없는 사례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관 중 상당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상한선 규정 외에는 위탁수수료를 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법령 또는 지침 등이 없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위탁수수료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8) 한국도로공사는 사업에 따라 일반관리비 외에 사업비의 0.44~3.34%를 이윤으로 수취하였다.

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4년 전체 매출액 1,421억원 중 70억원이 정부 위탁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11억 3,5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수취하여 16.2%의 평균 위탁수수료율을 나타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관련 주요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소관 부처	종류	전체 사업	정부 위탁사업			
			매출액(A) ¹⁾	매출액(B)	(B/A)	위탁수수료(C)	(C/B)
한국농업기술 진흥원	농촌 진흥청	기타 공공기관	142,118	7,020	4.9	1,135	16.2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4년부터 해당 정부 위탁사업을 시작하였다. 위탁수수료의 근거에 대해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부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본문에 ‘총 집행한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위탁대가를 지급받도록 근거를 두었다. 이 때의 ‘위탁대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위탁수수료를 말하는 것인지, 이윤만을 말하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사업별로 각각 4.2%, 5.0%의 기관 이윤을 포함한 총 12.1%, 16.9%의 위탁수수료를 각각 수취하였다.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16.9%)에 비해 농업개발기술 확산지원사업(12.1%)의 위탁수수료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직접 수행이 아닌 재위탁사업이라는 점⁴⁹⁾이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49) 농업개발기술 확산지원 사업은 2024년 전체 사업비 11억 1,600만원 중 91.2%인 10억 1,774만원이 6개 기관에 대한 재위탁(외주) 사업비로 집행되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위탁 사업별 세부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위탁사업비 (A)	위탁수수료					
		일반 관리비	A 중 비율	이윤	A 중 비율	계	A 중 비율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5,904	750	12.7	250	4.2	1,000	16.9
농업개발기술 확산지원	1,116	79	7.1	56	5.0	135	12.1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수입구조를 분석하면, 진흥원은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매년 운영비용에서 자체수입을 차감한 순손실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으며, 보전액은 2024년 기준 전체 수입액 1,421억원 중 359억원(25.3%) 규모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위탁수수료를 적게 받아 자체수입이 줄어들더라도 순손실액만큼 수지차 보전을 받으므로, 전체적인 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의 크기에는 큰 영향이 없는 사업구조를 띠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

대구분	금액	구성비	중구분	금액	구성비
정부 용역·보조· 국가연구사업수입	87,566	61.6	정부 용역사업수입 ¹⁾	10,802	7.6
			보조사업수입	73,773	51.9
			국가연구개발사업수입	2,991	2.1
자체 운영수입	18,603	13.1	종자판매	11,396	8.0
			기술료 및 출원수수료	1,565	1.1
			기술가치평가수입	336	0.2
			분석 및 검정사업	4,304	3.0
			기타수입(임대료 등)	1,001	0.7
이전수입	35,949	25.3	출연금수입 (수지차 운영비 보전)	35,949	25.3
계	142,118	100.0			

주: 1) 본 표에서 정부 용역사업수입은 정부 위탁사업을 포함하며 위 금액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작성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된 위탁사업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수지차 보전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관들의 자체 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⁵⁰⁾ 이에 따라 자체수입을 확충하려는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위탁수수료율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한 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농업기술 보급의 사업화를 통한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예산당국 및 부처(농촌진흥청)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수준의 수지차 운영비 지원액과 위탁수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경우, 위탁수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사업 난이도와 기관 능력 등과 같은 정부 위탁사업 자체의 특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운영비 지원 등 기관의 재무적 특성 또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 2024년 전체 매출액 568억원이 모두 정부 위탁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66억 2,9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수취하여 11.7%의 평균 위탁수수료율을 나타냈다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관련 주요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소관 부처	종류	전체 사업	정부 위탁사업			
			매출액(A) ¹⁾	매출액(B)	(B/A)	위탁수수료(C)	(C/B)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6,754	56,754	100.0	6,629	11.7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 크게 우체국금융사업과 우체국보험회관 관리사업 등 2개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탁수수료는 매년 체결하는 실무계약서(우체국금융사업) 또는 부처의 승인을 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우체국보험회관 관리사업)에 따라 수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 사업별로 각각 6.4%, 7.5%의 기관 이윤을 포함한 총 10.9%, 11.9%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각각 수취하였다.

50) 예컨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이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거나 자체수입을 확대한 경우 기관운영비를 추가 적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의 위탁 사업별 세부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위탁사업비 (A)	위탁수수료					
		일반 관리비	A 중 비율	이윤	A 중 비율	계	A 중 비율
우체국금융사업	45,181	1,990	4.4	3,381	7.5	5,371	11.9
우체국보험회관관리사업	11,573	516	4.5	742	6.4	1,258	10.9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기관 수입의 전액을 전액 정부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기관이다. 이처럼 정부로부터의 수탁 수입 외에는 별도의 예산 확보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운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관의 필수적인 기능 운영을 위해 정부 수탁사업에 대해 타 기관 대비 높은 이윤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역시 동 위탁사업을 통해 수취한 위탁수수료는 수탁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외에도 기관의 일반 운영관리, 법인세 납부 등 고유 목적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별도의 직접적인 운영비 지원이 없는 기관 특성 상 기관의 목적사업과 경영관리부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의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

대구분	금액	구성비	중구분	금액	구성비
수탁사업수입 ¹⁾	56,754	100.0	회관관리수익	11,573	20.4
			예금수탁관리수익	9,219	16.2
			정보화수탁관리수익	2,019	3.6
			보험수탁관리수익	33,943	59.8
연구용역사업수입 ²⁾	없음	없음			
이전수입(운영비 지원)	없음	없음			
계	56,754	100.0			

주: 1) 본 표에서의 수탁사업수입은 감사보고서에 따른 금액으로서 작성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23년까지는 일부 연구용역사업수입이 있었으나 2024년도에는 없음

자료: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의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의 경우에도 위탁수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정부 위탁사업 자체의 특징 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입구조 및 정부의 별도 운영비 지원 여부 등 재무적 특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참고 :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추가 검토

한편, 지금까지 분석한 65개 위탁수수료 수취기관 외에 위탁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는다고 밝힌 나머지 76개 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명목상으로는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일부 기관의 직접사업비 내에는 위탁수수료 성격의 간접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사업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간접비가 엄밀하게 구분되어 편성되지 않고 직접사업비에 혼재된 사례가 상당수의 기관에서 발견되었다. 이 경우, 사업에 따라서는 사실상 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가 직접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기관별로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앞서 언급한 76개 기관의 사업별 위탁사업비 상세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4개 기관(71.1%)이 직접사업비 편성 시 실제 소요되는 투입단위 및 산출단가를 고려한 상세 산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8개 기관(10.5%)은 상세 편성자료를 갖추고 있었으나, 단순히 정부예산 비목⁵¹⁾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고 있어 투입단위에 근거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명확한 분리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위탁사업에서 직접사업비와 위탁수수료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이 실제로 수취하는 간접비적 성격의 비용을 분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51)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일반용역비 등 정부의 품목별 지출 성질기준에 따라 구분된 경우를 말하며, 반면 직접비 또는 간접비와 같은 사업원가 기준으로 구분되지는 않은 경우를 말한다.

[위탁수수료 미수취 공공기관의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개 기관)

소관부처	사업비 편성시 직·간접비를 구분하지 않음		구분함
	상세 단가편성자료 없음(미제출 포함)	비목별 편성자료만 존재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가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	-
기획예산처	한국재정정보원	-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보육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
원자력안전 위원회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통일부	-	(사)남북교류협력지 원협회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	-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	-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	-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
문화체육 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게임물관리 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해양수산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 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산업통상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단위: 개 기관)

소관부처	사업비 편성시 직·간접비를 구분하지 않음		구분함
	상세 단가편성자료 없음(미제출 포함)	비목별 편성자료만 존재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 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립암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 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한국철도공사
성평등 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 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계	54	8	14

주: 사업수 기준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상세 단가편성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총액 기준(Lump-sum)으로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저해될 수 있다. 상세 산출 내역의 부재는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직접사업비 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차원의 간접비 목적으로 임의 배분·집행할 소지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사후 감시와 검증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정산 시 위·수탁 기관 간 마찰을 유발하고 환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사업의 성과 관리 및 적정 원가 산정이 곤란해진다. 사업별 원가 기준에

근거한 세부 편성내역이 누락되면 사업 효율성을 평가할 기준을 찾기 어려우며, 예산의 과다·과소 책정에 따른 재정 낭비와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기 어렵다. 나아가 적정 원가 데이터 축적이 불가능해져 산출 근거가 불투명한 ‘깜깜이’ 계약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셋째, 법적·감사적 리스크가 가중된다. 구체적인 집행 근거가 결여된 총액 계약은 상급 기관의 회계 감사 시 예산 관리 소홀로 지적될 개연성이 높으며, 세부 증빙이 느슨해짐에 따라 허위 청구나 인건비 중복 계상 등 부정수급 및 예산 편취에 취약해질 수 있다.

넷째, 수탁기관의 자율성이 예산 오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보장된 자율성이 오히려 위탁사업 본래 목적보다 수탁기관의 고유 운영비나 인건비를 우선 배정하는 ‘주객전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총액 내에서 기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 비용을 축소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공공부문은 원가계산 용역 등을 통해 사전에 세부 비목을 확정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 위탁사업 추진 시 협약서 내에 명확한 단가 편성 근거를 명시하고 용도 간 전용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탁사업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마. 소 결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관 중 상당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의 상한선 외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산정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업 및 수탁기관의 규모, 재위탁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둘째, 산정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정한 결과, 실제로는 사업 자체의 특성 외에도 해당 기관의 별도 운영비 지원 여부 등 재무적 특성이 수수료율 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는다고 밝힌 76개 기관의 사

례에서 알 수 있듯, 사업비 편성 시 직접사업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원래라면 위탁수수료를 통해 충당해야 할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이 실제로는 직접 사업비에 혼용되어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정부가 공공기관들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정부 위탁사업은 상당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관별로 위탁수수료율의 편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관 및 사업 간 위탁수수료의 객관적 비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수탁하려는 개별 부처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위탁수수료율 책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사업별 특성 및 수행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위탁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비 산정 시에도 직접비와 간접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간접비적 성격의 비용은 일반 관리비 등 위탁수수료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재무적으로 열악한 상당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의 일부 공공기관처럼 위탁수수료율에 이를 반영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에서는 직접사업비 수준의 실비만 지급하고 대신 재정 지원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설·증액하여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재정 당국 차원의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 개 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⁵²⁾에 따르면 정부 위탁사업을 수탁받은 공공기관(원수탁기관) 등은 법령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타 기관(재수탁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보다 사업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역량이 있는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기본적으로 재위탁은 당초 정부가 공공기관에 위탁한 업무를 제3의 재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사업주체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 위험이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관여하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위탁에 대한 법령상 정의는 아직 없으나, 본 분석에서 재위탁은 공공기관이 수탁받은 정부 위탁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수취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때 타 기관에 맡긴다는 의미는 공공기관(원수탁기관)과 재수탁기관 간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뿐 아니라 용역계약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을 통해 사업 수행을 맡기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또한 단순한 사무 집행업무의 수행에 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수탁기관이 해당 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별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였다.

5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재위탁) 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나.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여부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분석대상 정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1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위탁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8.7%에 해당하는 111개 기관은 재위탁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위탁 사업이 존재하는 기관은 총 30개 기관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재위탁 사업 수가 1개인 기관이 13개(9.2%), 2~3개인 기관이 11개(7.8%)이며, 4개 이상의 사업을 재위탁하는 기관도 6개(4.3%)로 파악되었다. 사업비의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는 재위탁 구조가 일부 기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여부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 수	비중
재위탁 사업 없음		111	78.7
재위탁 사업 있음	재위탁 사업수 1개	13	9.2
	재위탁 사업수 2~3개	11	7.8
	재위탁 사업수 4개 이상	6	4.3
	소계	30	21.3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00.0

주: 재위탁은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세부현황

재위탁 사업이 있는 30개 기관을 세부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 중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1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에서 재위탁 사업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4개 기관은 4개 이상의 정부 위탁

사업을 제3의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4개 소관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에서 재위탁이 있었으며,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4개 이상의 다수 사업을 재위탁하였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3개), 보건복지부(3개) 등 총 30개 기관에서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재위탁 현황이 확인되었다.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여부 : 기관별 세부현황]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전체 위탁사업 수행기관 수	그 중 재위탁 사업이		
			1개	2~3개	4개 이상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1	-	한국조폐공사	-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 식품부	5	-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 화정보원	-
	해양수산부	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농촌진흥청	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지식재산처	4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
보건복지 위원회	보건복지부	16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립암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위원회	고용노동부	8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기후에너지 환경부	12	한국상하수도협회	국립생태원	-

(단위: 개 기관)

소관위	소관부처	전체 위탁사업 수행기관 수	그 중 재위탁 사업이		
			1개	2~3개	4개 이상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교통부	11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그 밖의 부처		53	-	-	-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13	11	6

주: 재위탁은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재위탁 시 공공기관의 수수료 수취 수준

재위탁 사업은 비용 구조상 정부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탁받은 공공기관(원수탁 기관)과 재위탁받은 기관(재수탁기관) 모두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과도한 위탁수수료가 지급될 경우, 이는 전체 사업비에서 직접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전체 공공기관 현황

정부 위탁사업을 타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30개 공공기관의 위탁수수료 수취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위탁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관은 15개 기관이었으며, 그 중 10개 기관은 재위탁이 아닌 직접 수행사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기관이었다.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시 공공기관의 위탁수수료 수취 현황]

(단위: 개 기관, %)

구분			기관수	[참고] 전체 위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수취함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재위탁 사업이 있음	재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함 ¹⁾		15	15	
			비중	50.0	
	재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음		15	5	10
			비중	50.0	16.7
	소계		30	20	10
			비중	100.0	66.7
재위탁 사업이 없음			111	45	66
계 (전체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			141	65	76

주: 1) 일부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포함

1. 재위탁이란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중 50% 이상을 타 기관에 다시 맡겨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기관별 세부현황

정부 위탁사업을 타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30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위탁수수료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해양환경공단이 38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조폐공사가 11억 1,7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들 2개 기관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는 각 재위탁 사업비의 5.5~8.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기관의 경우, 정부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보다 타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수취하는 수수료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의 기관은 일부 정부 위탁사업에서 해당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보다 타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가 더 높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위탁사업의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 수취 현황 : 공공기관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번	기관명	재위탁 사업			직접 수행		
		매출액 계(A)	위탁수수료 계(B)	비율 (B/A)	매출액 계(C)	위탁수수료 계(D)	비율 (D/C)
1	해양환경공단	44,960	3,899	8.7	63,981	3,442	5.4
2	한국조폐공사	20,408	1,117	5.5	100	3	2.5
3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116	135	12.1	5,904	1,000	16.9
4	항공안전기술원	24,351	119	0.5	9,291	148	1.6
5	한국부동산원	6,414	110	1.7	126,538	858	0.7
6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124	60	2.8	39,655	1,301	3.3
7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16,019	50	0.3	5,523	48	0.9
8	국립생태원	4,000	44	1.1	5,567	273	4.9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736	31	1.8	1,071	26	2.4
10	한국특허기술진흥원	529	27	5.1	15,163	386	2.5
11	국립해양생물자원관	532	26	5.0	1,236	68	5.5
1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069	15	1.4	8,201	448	5.5
13	한국상하수도협회	2,930	6	0.2	475	7	1.5
14	한국교통안전공단	23,430	6	0.0	6,300	200	3.2
15	주택도시보증공사	5,122	4	0.1	1,097	52	4.8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관(15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국립암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주: 1. 연번은 재위탁 사업의 위탁수수료 합계액 순위

2. 음영은 직접 수행사업에 비해 재위탁 사업의 (위탁수수료/매출액) 비율이 더 높은 경우를 표시한 것임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주요 세부기관별 분석 : 해양환경공단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위탁사업의 상당 부분을 타 기관에 재위탁하면서도 직접 수행사업보다 높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재위탁 규모와 위탁수수료율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을 사례 기관으로 선정⁵³⁾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기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공단 재위탁 사업의 상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액 2,088억 2,400만원 중 52.2%인 1,089억 4,100만원이 정부 위탁사업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 정부 위탁사업비의 41.3%인 449억 6,000만원 규모의 사업은 타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되었다.

[해양환경공단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관련 주요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기관명	소관 부처	종류	전체 매출액 ¹⁾	정부 위탁사업(A)		A 중 재위탁 사업	
				매출액	위탁수수료	매출액	위탁수수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준시장형 공기업	208,824	108,941	7,341	44,960	3,899

주: 1) 전체 매출액은 2024년도 감사보고서(별도 또는 고유계정)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기관 특성에 따라 사업수익,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양환경공단은 재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재위탁 사업비(449억 6,000만원)의 8.7%인 38억 9,9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수취하였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2024년 침물선박관리사업(108억 6,000만원)의 경우, 사업비의 62.9%에 해당하는 68억 2,600만원을 9개 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양환경공단은 8억 40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수취하였다(위탁수수료율 7.4%).

53) 선정기준은 재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17개 공공기관 중 직접 수행사업에 비해 재위탁 사업의 (위탁수수료/매출액) 비율이 더 높은 5개 기관(해양환경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가운데

① 재위탁 사업의 위탁수수료의 비율이 17개 기관 평균인 4.0% 이상이고,

② 재위탁 사업 및 직접 수행사업의 위탁수수료 합계액이 각각 5,000만원 이상인 기관을 선정함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해양환경공단이 재위탁 사업에서 수취하는 위탁수수료율은 사업별로 4.8~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위탁 사업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15개 공공기관의 재위탁 사업 평균 수수료율 3.7%보다 높은 것이다.

[해양환경공단의 재위탁 사업별 세부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전체 위탁사업비 (A)	재위탁			해양환경공단	
		기관 수	재위탁비용 계(B)	비율 (B/A)	위탁수수료 (C)	비율 (C/A)
2024년도 노후 폐유수용 시설 현대화	5,445	6	2,656	48.8	495	9.1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10,524	2	8,057	76.6	1,052	10.0
온산항 특별관리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5,740	1	4,710	82.1	574	10.0
갯벌세계유산관리사업	2,040	6	1,327	65.0	225	11.0
2024년 침물선박관리사업	10,860	9	6,826	62.9	804	7.4
2024년 해양치유 활성화 지원	700	3	371	52.9	33	4.8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6,824	25	4,505	66.0	506	7.4
2024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	1,560	2	900	57.7	115	7.4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267	2	851	67.1	94	7.4
계	44,960	-	30,202	67.2	3,899	8.7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해양환경공단이 일부 재위탁 사업에 대해 타 기관 대비 높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데에는 기관 재무여건의 상 취약성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설립 근거법인 「해양환경관리법」 상 사업비 외에는 정부로부터 별도로 기관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출연·출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⁵⁴⁾ 이에 따라 현재 해양환경공단은 기관 운영비 마련을

54) 이에 대해 제19대국회에서는 법 제103조제7호를 개정하여 공단이 정부로부터 운영비 목적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하여 위탁수수료와 자체수입 등으로 간접비적 성격의 운영원가를 충당하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21416호) 조문]

제104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103조(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제분담금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
2.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5. 1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6. 자산운용수익금

7.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8.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실제로 해양환경공단의 감사보고서 상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수입(매출액) 2,088억 2,400만원 중 위탁사업수입 1,031억 6,400만원(49.4%)⁵⁵⁾을 제외하면, 예선운영사업⁵⁶⁾·단지관리사업⁵⁷⁾ 등에서 나오는 자체수입(용역사업 포함) 717억 6,800만원(34.4%),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⁵⁸⁾⁵⁹⁾에 따라 특정 규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911529호)이 발의된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55) 본 금액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위탁사업의 범위 등 작성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된 위탁사업 매출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6) 전국 주요 항만에서 예선(tugboat)을 운영하여 대형 선박이 부두에 안전하게 이·접안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말한다. 예선은 평상시 항만 물류 기능 지원 및 비상시 방제·구난업무 등에 활용된다.

57) 남해 및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중 바다 모래 채취가 지정된 지역인 ‘친환경 해양 골재채취단지’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58) 방제분담금은 법률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방제선 배치, 자재 보관 등의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 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모 이상의 선박이나 해양시설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제분담금 수입 272억 4,900만원(13.0%) 등이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조사업비 수입 등을 제외한 기관운영 목적의 출연금 등은 정부로부터 별도로 수취하고 있지 않다.

[해양환경공단의 수입구조 현황]

(단위: 백만원, %)

대구분	금액	구성비	중구분	금액	구성비
위탁·대행사업수입	103,437	49.5	위탁사업수입 ¹⁾	103,164	49.4
			대행사업수입	273	0.1
자체 운영수입	71,768	34.4	예선운영수입	30,554	14.6
			단지관리수입	20,514	9.8
			정부·지자체로부터의 용역사업수입	19,789	9.5
			기타수입 (폐유, 교육, 임대 등)	911	0.4
정부보조수입	33,620	16.1	분담금수입	27,249	13.0
			보조사업수입	5,230	2.5
			기타수입 (방제, 부담금 등)	1,141	0.5
계	208,824	100.0			

주: 1) 본 표의 위탁사업수입 등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위탁사업의 범위 등 작성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된 위탁사업 매출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해양환경공단의 2024년도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타 기관에 실 제 수행을 맡기고 공단은 관리 책임만 부담하는 재위탁 사업에 대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와 수수료 수취 구조 간의 괴리를 가져오는 산정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환경공단 소관 정부 위탁사업은 재위탁 여부에 따라 위탁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도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앞으로도 이러한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해양환경공단 소관 정부 위탁사업은 위탁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탁수수료율의 상한⁶⁰⁾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위탁수수료율과 금액은 사업별 협약서를 통해 비로소 결정된다. 반면, 재위탁 사업에 대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실제로도 재위탁 사업에 대해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해양환경공단의 사업별 위탁수수료 규정 및 위탁수수료율 현황]

(단위: 백만원)

직접 수행사업			재위탁 사업		
사업명	전체 사업비	협약서상 위탁수수료율 (실제 수취)	사업명	전체 사업비	협약서상 위탁수수료율 (실제 수취)
2024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9,749	8.0% (6.7%)	2024년 침물선박관리사업	10,860	8.0% (7.4%)
2024년도 청항선 관리 및 선박폐유 수거처리	16,126	미지급 (미지급)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10,524	10.0% (10.0%)
2024년 해양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 사업	8,959	8.0% (7.4%)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6,824	8.0% (7.4%)
2024년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4,017	8.0% (7.4%)	온산항 특별관리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5,740	10.0% (10.0%)
2024년 무인도서 해양쓰레기 관리업무	3,000	8.0% (6.7%)	2024년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5,445	10.0% (9.1%)
직접 수행사업 계	63,981	(5.4%)	재위탁 사업 계	44,960	(8.7%)

주: 1. 협약서 상 위탁수수료율의 산정 기준을 사업비 계약총액이 아닌 '집행한 금액' 등으로 한 경우, 협약서상 위탁수수료율과 실제 사업비 대비 수취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음

2. '직접 수행사업', '재위탁 사업' 각각 사업비 순으로 상위 5개 사업을 예시로 제시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100분의 6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6. 장비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100분의 15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100분의 10

마. 소 결

상당수의 정부 위탁사업에서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⁶¹⁾ 및 같은 영 시행규칙⁶²⁾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위탁수수료는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탁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업무량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위탁 사업 시 원수탁기관(공공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 차등을 두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기관에 따라서는 직접 수행 또는 재위탁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탁수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원수탁기관과 재수탁기관 모두에게 고율의 위탁수수료가 지급되어 제한된 사업비 내에서 실제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비중이 감소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재위탁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산정 시 해당 공공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수행사업 대비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4.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 노무비·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본 분석에서는 2025년 지정 기준 전체 33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위탁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크게 ① 위탁 및 수수료에 관한 계약형태와 ② 기관별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및 요율 현황, ③ 제3의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율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형태와 관련하여, 정부 위탁사업 수행 시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부처와 공공기관 간에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일부 정부 위탁사업은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의무와 책임 관계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완결성 있게 규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위·수탁 당사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사업이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위탁수수료 수취 규모 및 요율과 관련하여, 현재 기관 간 위탁수수료율에 큰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명확한 산정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제각기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위탁수수료 관련 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위탁수수료율 산정 과정에서 기관의 재무 특성 등의 다양한 사업 외적 요인이 개입하고, 직접사업비 편성 과정에서도 간접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일부 확인되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재정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원칙 설정이 재정 당국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위탁 시 위탁수수료율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타 기관에 실제 수행을 맡기고 관리 책임만 부담하는 재위탁 사업으로부터 오히려 더 높은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재위탁 시 원수탁기관(공공기관)이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 위탁사업은 실무상 부처별·기관별로 운영상의 편차가 아직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으로, 이는 상당 부분 정부 위탁사업을 일반적으로 관

리하는 기준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정부 위탁사업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2024년 12월에 관련 제정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제출⁶³⁾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정부제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위탁수수료율 부과와 관련한 재정당국 차원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3)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7018호)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일	2026년 5월 1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3782)

ISBN 979-11-6799-250-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